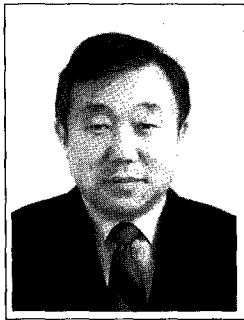




#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유치 공모 - 그 성공과 실패 -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환경정책학과 교수



자유 공모 추진 배경과 정부의 유치 노력

## 1. 유치 공모 추진 배경

우리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국가 전체의 전력 사용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 종합 관리 시설의 건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방사성 폐기물은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가동중인 16기의 원전 외에도 2008년까지 추가로 8기가 건설될

예정이지만 폐기물 처리장 하나 없이 발전소 부지나 지하 등에 저장·보관하는 임시 방편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시킬 수 없다.

지난해 말 각종 방사성 폐기물은 5만5,000드럼이나 되며 사용후 핵연료도 4000톤을 넘어서 2006년 이후에는 이를 처리할 방도가 없는 형편이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실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1998년 9월에 제249차 원자력 위원회를 열어 국가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2000년 6월 전국의 기초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및 부대 시설 부지」라는 이름으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과 사용후 연료 중간 저장 시설 건설을 위해 지난 10년간 시도했던 정부 주도의 입지 선정과는 다른 '자유 공모'라는 형식을 시도하였다.

자유 공모 방식은 전국 임해 지역 46개 기초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을 공

모, 주민들이 유치를 원하면 자치 단체 의회의 동의를 첨부해 해당 시장·군수가 신청한 후 지질 조사 등을 거쳐 적합한 지역을 선발하게 된다. 부지 규모는 임해 지역 약 60만평(정지 면적 24만평 가능 지역)으로 자연 환경과 인문·사회적 요건에 부합된 지역으로 관련 법령상 부지 위치기준이 적합한 지역이다.

1986~1995년까지 진행되었던 5차례의 시도 중 3차 부지 확보 사업에서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자원(自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지만 지금과 같은 개념의 자유 공모는 아니었다.

사업자 주도의 일방적 부지 확보 사업을 진행하던 정부가 자유 공모라는 방법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주민의 동의 여부가 사업의 성공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 이유다.

안면도와 굴업도 등의 예에서 처

럼 정부의 비밀스런 정책 결정과 사업 진행이 오히려 주민의 반발과 저항을 가져와 오히려 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하였다는 것을 자각하고 사업 추진의 투명성 제고 및 지역 주민의 의사 존중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 '부지 자유 공모'라는 공개된 방법으로 부지를 확보하려 한 것이다.

또한 동강댐 건설 저지, 4·13 총선 낙선 운동 등에서 확인된 환경단체·시민 단체와 주민들의 연대에 의한 강력한 반대 역시 사업자(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인해 부지 선정 방식의 변화를 초래한 가지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 중심의 198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와 반쪽 지방 자치(지방 의회 의원만 선거)였던 1990년대 초와는 달리, 현재 지방 자치의 발전으로 인하여 '지역의 이익'을 민주주의로 인식하는 NIMBY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지난 10년의 입지 선정 과정의 사례에서 NIMBY에 의한 실패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NIMBY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유 공모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 것이다.

둘째, 산업자원부·한국전력·원자력환경기술원은 입해 지역의 낮은 지방 재정 자립도의 지방 정부들을 향해 경제적 유인 정책을 시도하

〈표 1〉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사업 종류	사업 내용	시행자	지원 대상 지역
기본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지자체장	주변 지역
	공공 시설 사업	지자체장	
	육영 사업	한전	
특별 지원 사업	기본 지원 사업에 준하는 사업	지자체장	지자체 관할 구역
전기 요금 보조 사업	가정 및 기업체 전기 요금 보조	한전	주변 지역
주민 복지 지원 사업	장기 저리 융자	지자체장	주변 지역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장기 저리 융자	지자체장	주변 지역

〈표 2〉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

사업 종류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억 원)	산정 기준
기본 지원 사업	건설 및 운영 기간	914	원자력발전소 380만 kW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
특별 지원 사업	건설 기본 계획 확정 이후	1,254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전기 요금 보조 사업	건설 및 운영 기간	242	산자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주민 복지 지원 사업	건설 준비시부터 5년	10	산자부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기업 유치 지원 사업	건설 및 운영 기간	91	기본 지원 사업 지원금의 10%

\* 지자체장이 시설을 유치할 경우 원자력발전소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418억원)이 특별 지원 사업에 추가 지원됨

\* 자료 : 한국수력원자력(주)

여 주민들에게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으며 그 결과 자유 공모가 성공하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것이다.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관리는 이미 미국·일본·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희망을 가질만한 것이다.

또한 사회 규범적 요인과 함께 3,000억원 정도의 지원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지방 정부를 유인할 만한 것이었다. IMF 위기 이후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국의 상황 속에서 3,000억원 규모의 경제적인 유인책은 성공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볼 것이다. 〈표 1〉과 〈표 2〉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나타낸다.

## 2. 정부의 유치 노력

정부의 유치 공모 추진 노력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부지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와 조직을 보강하였다. 산업자원부·한국전력공사·원자력문화재단 합동으로 「부지확보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고, 원자력환경기술원 조직을 보강하는 등 부지 확보 위주로 개편·운영하였다.

대국민 홍보를 위해 언론을 통해 사업 홍보를 대규모로 하였다. 13개 중앙 신문에 「부지 유치 공모」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부지 공모와 사업의 안정성, 지역 지원에 대한 광고를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TV를 통한 캠페인 광고(75회), 원자력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상업 광고,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KBS 1TV)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의 홍보를 위한 책자와 비디오, 처분 시설 축소 모형 전시물 제작 등에도 열의를 보였다. 특히 환경 단체와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방사성 폐기물 반대의 입장도 청취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외에도 유치 유망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사업 설명 및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정부 부처 출입 기자와 폐기물 처리 예상 지역의 여론 주도 인사를 초청하여 해외 처분 시설 견학 등의 노력도 아울러 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정했던 1년의 부지 유치를 위한 노력은 실패했다.

위와 같은 정부의 유치 노력들을

시간이 순서대로 차례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000년 4월 : 산업자원부에서 유치 공모 시행을 결정하고 관계 기관 Brainstorming을 개최하여 유치 공모 발표 시기 토의 및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 2000년 6월 : 한국전력공사 사장의 결재로 유치 공모 시행 방침이 결정되어 유치 공모 홍보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언론사 논설·해설 위원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27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유치 공모 발표되었다.

• 2000년 7월 : 임해 지역 지자체 경제 담당 공무원 초청 교육 및 1·2차 임해 지역 지자체 방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광역 지자체 10곳, 기초 지자체 46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결과, 광역 자치 단체인 전라북도 외 5개 지자체 35명 참석, 기초 지자체 전북 고창군 외 29개 지자체 242명 참석하였다.

• 2000년 8월 : 홍보 자문 회사로 (주)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지역 홍보 추진 계획 검토 지방 일간지 및 잡지 광고 문안 검토, 보도 기사에 대한 반박문 검토 등의 내용을 자문 받았으며, 영상 매체 홍보 활동으로 KBS1, KBS2에 총75회의 공익 광고를 방영하고, 전문가 등의 언론 기고, 투고를 통한 부지 확보 필요성 등을 홍보하였다.

• 2000년 9월 : 관계 기관 Brainstorming을 개최하여 사업 설명 결과 보고 및 유치 신청 촉진 방안을 토의하였는데, 여기서는 관심 지역 주요 인사 및 임해 지역 공무원 해외 시설 시찰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중앙 언론 중심의 홍보에서 지역 집중 홍보 위주로 전환이 필요함을 느끼고 국정홍보처 중심의 '공익 광고, 국정 신문 광고, 팜플렛 제작' 건을 지역 언론 매체 중심의 광고·기획 기사 위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 2000년 11월 :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으로 KBS 1TV '수요기획' 프로그램에 선진 사례 보고 「두 얼굴의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하였고, 임해 지역 지자체 공무원 등 일본 처분 시설 시찰 지원을 하였다. 지역 공무원, 언론 기자 및 주요 인사 1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룻카쇼무라 처분 시설 및 동경전력관을 시찰하여 처분 시설 운영상의 안전성, 지역 주민의 이해 정도 및 지역 발전을 확인하였다.

• 2000년 12월 : 34개 지방 일간지에 시설 부지 공모, 시설 안정성, 지역 지원 내용 등을 1·2·3차에 걸쳐 광고, 임해 지역 유선 방송을 통해 선진 사례 보고 「두 얼굴의 방사성 폐기물」 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 2001년 3월 ~6월 : 새로운 추진 전략으로 유망 지역 중점 지원

및 활동 역량 결집, 추진 체제의 전면 개편 및 보강으로 추진 기반 강화, 다각적인 홍보 활동 강화로 주민 수용성 제고, 유관 지역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적극적·전향적 대응으로 반대 운동 사전 차단 등을 채택하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치 가능성 높은 영광·고창·진도·하동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지방 의회의 공식적인 반대 표명 지역인 양양, 보령은 전략상 일정 기간 동안만 관리하기로 하였다.

사업자의 부지 확보 추진 체제 조기 보장 정비 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부지확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 당·정 협의를 통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였다.

지방 의회 등 영향력 있는 인사를 위주로 하는 해외 선진 시설 시찰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의 핵심 인사를 선정, 기관별 또는 지역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홍보 및 설득을 추진하였다.

환경 단체 및 시민 단체(NGO)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책으로 「전담 대응 조직」을 설치하는 등 상시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고, 해외 처분 시설의 안정성 공동 조사 제의 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추진하였다.

### 자유 공모에 대한 주민과 환경 단체들의 저항 : 그 이유

#### 1. 자유 공모에 대한 불신

##### 가. 원자력 발전과 연계된 불신

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을 필두로 한 시민 단체의 자유 공모에 대한 불신은 정부의 원자력 확대 정책과 연계되어 있다. 즉 정부가 장기 전력 공급 계획에서 원전의 추가 건설을 통한 에너지 공급 정책을 택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원자력발전소를 설립하는 전제 조건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건설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 단체의 불신은 원자력발전소의 확대 건설을 통한 원자력 위주의 전력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장기 발전 정책에 기인하는 것이다.

2000년 5월 4일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철회 없는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환경운동연합의 논평에서 원자력 발전과 연계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대한 입장을 볼 수 있다.

“이 땅에 단 한기의 핵발전소는 물론 한 평의 핵쓰레기장 건설도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월 13일 정부는 이른바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서 2015년까지 8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해 이 땅에 28기의 핵발전소를 세우겠다는 어처구니없는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동구

권의 2~3개국, 일본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개국을 제외하고 핵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국가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매년 16개 정도의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핵쓰레기는 200ℓ, 드럼으로 3,700드럼 이상이다. 현재 정부의 계획처럼 28기의 핵발전소가 세워진다면 이 땅 전체를 핵쓰레기장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것이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일단 20기, 30기씩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나서, 여기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쓰레기들을 처분하기 위해서 핵쓰레기장을 또 건설해야 하니 양해해 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의 실상이다. ‘화장실 없는 맨션’ 핵발전소 수 십기, 어떤 선진국도 안전하게 건설한 유례가 없는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으로 이제 더 이상 이 땅을 더럽힐 수 없다.

또한 정부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 공모를 공식 발표한 직후 나온 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 「정부의 핵폐기장 유치 공모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에서도 원자력 정책과의 연계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 공모를 비판하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전은 오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 60만평을 유치 공모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간 정부는 핵폐기장을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주민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 폐쇄적인 핵폐기장 건설을 강행하였다. 이로 인해 안면도, 울진, 굴업도 등 정부에



서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한 지역에서는 목숨을 건 반대 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정부는 계획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산자부와 한전이 이런 선례를 따르지 않고 가능한 한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핵폐기장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발표는 일견 핵폐기장에 대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한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상의 변화가 한국의 핵위주 에너지 정책에 대한 면죄부나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부과해주는 않는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발전소의 추가 건설,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과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16기의 핵발전소가 운전 중이고 4기가 건설중이며 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2015년까지 8기를 추가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핑계로 국민에게 핵폐기물 처분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20기, 30기 이상 계속 건설되는 한 아무리 많은 핵폐기물 처분장이 건설되도, 설사 이 국토를 모두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만들어도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위험한 핵쓰레기들을 처분하기는 불가능하다. 핵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안전한 방법은 빨리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핵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포기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미 독일과 스웨덴은 2021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완전 폐쇄하고 소수력, 태양에너지,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세계적 핵발전소 건설 기업인 ABB사도 핵산업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직 한 국과 몇몇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들만이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아니다. 우리에게 아이들 체르노빌과 발부츠의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줄 막중한 책임이 있다.

#### 나.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의 일괄 처리에 관한 불신

환경 단체는 안전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을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과 함께 처리하려는 것에 대한 안전의 문제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신 중에는 중·저준위 폐기물 부지 공모를 하면서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포함시켜 놓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도 있다.

부지 공모에 대한 홍보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연구 처분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 저장 시설 문제는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지방 정부와 주민들은 보고 있다.

#### 다. 정부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불신

정부의 사업 방식은 이전과 달라

진 접근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정부(산자부·한전·원자력환경기술원)는 여전히 일방적인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 관리를 홍보하며 주민 유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 작업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전과 같은 방식이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1990년대 초의 안면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지역 개발이 미치지 못한 낙후된 지역(안면도)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개발」이라는 당근을 던지면서 유치를 유도하던 방식을 현재까지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1994~1995년의 굴업도처럼 주민의 수가 적은 도서 지역(영광 송이도, 보령 삼시도)을 그 대상으로 하여 유치 공모를 전개했다.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주민 설득이 상대적으로 쉬운 도서 지역이나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에서 보면 방사성 폐기물 시설에 적절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설득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지역이 비용의 측면에서나 정치적인 설득 노력의 정도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부의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지나친 비난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부가 부지 공모를 위한 주

민 설득 작업을 광범위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역 유지 위주'의 여론 조성 방법을 택하고 있다. 지역 유지의 해외 시설 시찰과 해당 지역 주민의 원자력 시설 시찰 등은 1986~1995년 3차와 4차 부지 확보 사업에서 영일·안면도·양산·울진 등 모든 지역에서 사용하였던 방식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마다 지역의 엘리트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여론 주도층을 포섭하여 정부 정책의 동조 집단으로 삼는 것은 정책 집행에 있어 상당한 의의를 갖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설립될 시에 가장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있는 것은 지역 유지가 아닌 지역 주민이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정부의 여론 조성 방법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 단체는 정부의 사업 추진이 국가 중요 시설의

설치에 대한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지역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 또한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가고 있는 정부에 대해 환경 단체는 계속 저항하고 있다.

## 2. 환경 단체의 대응

환경 단체의 부지 공모에 대한 대응은 예전에 비해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렬한 시위와 지역 이기주의에 기댄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을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축이 되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sup>1)</sup>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들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위험성과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전하고, 폐기물 처분장 거부선언에 동

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16대 총선에서 보여 주었던 낙선 운동의 내년 지방 선거에 시도할 것을 무기로 지방 자치 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지방 자치 단체와 지방 의회 의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그 질의 내용과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각 지자체에 대한 질의 내용

「지난 6월 27일 한국전력과 산업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부지 유치공모」를 발표하고 핵폐기장을 유치하면 지역의 발전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46개 임해 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핵폐기장의 유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물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백년 이상을,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수천 년에서 수만 년까지 외부로 방사능이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하는 등 인간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는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게다가 핵폐기장은 그 자체의 위험성과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사용

1) 지역 순회 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환경운동연합 보도 자료).

▶ 지역 순회 일정 : 울산광역시(2000년 8월 9일), 충남 안면도(8월 11일), 경남 남해군(8월 17일), 광주광역시(8월 21일), 인천광역시(8월 24일)

▶ 순회 설명회 내용

- 핵폐기장, 핵발전소의 위험성, 정부안의 설명  
- 요약문

「현재 핵폐기장에 대한 한전의 계획은 중저준위 영구 처분장과 사용후 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을 동시에 건설·운영한다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 고방사능의 극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이 사용후 핵연료는 각 핵발전소로부터 핵폐기장까지 운반해 오기까지의 과정과 보관되는 핵폐기장에 이르기까지 방사능 누출 등 사고의 가능성, 이로 인한 지역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과 같은 고준위 핵폐기장의 사고예는 구소련의 우랄산맥에서 발생했던 핵폐기 시설 사고와 첼라빈스크 폭발 사고 등 수백명이 사망하고 대규모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된 선례들이 여러 차례 있다. 1997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발부츠 핵폐기장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빗물과 지하수에 중저준위 핵폐기물과 물레 같이 저장되어 있던 사용후 핵연료가 외부로 누출되어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킨 것이다」



〈표 3〉 지자체의 답변 현황

지역	답변 현황	지역	답변 현황
강원도 고성군	○ (군의회 답변)	경남 통영시	○
강원도 양양군		경남 거제시	○
강원도 강릉시		경남 사천시	○
강원도 삼척시	○	경남 남해군	○ (군의회 답변)
경기도 평택시		경남 하동군	
경기도 화성군	○	전남 영광군	○
경기도 김포시		전남 신안군	○
인천시 강화군		전남 해남군	○
인천시 옹진군	○	전남 진도군	
충남 서천군	○	전남 무안군	
충남 보령군	○ (시의회 답변)	전남 완도군	
충남 홍성군		전남 보성군	
충남 태안군		전남 고흥군	○
충남 서산시	○	전남 장흥군	
충남 당진군		전남 강진군	
충남 아산시	○	전남 여수시	○
경북 경주시	○	전남 광양시	○
경북 포항시	○	전남 순천시	○
울산시 울주군	○	전남 함평군	○
부산시 기장군	○	전북 고창군	
경북 영덕군	○	전북 군산시	
경남 마산시		전북 김제시	
경남 고성군		전북 부안군	

폐기장 건설과 나아가 핵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임.

과거 제 3차 부지 확보 사업의 영일군 청하면의 사례에서는 환경운동연합(당시에는 공해추방운동협의회)의 핵폐기장 반대를 위한 특별 강연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당시의 특별 강연은 현재의 순회 설명회와 비슷한 형태인데 비해 제3차 부지 확보 사업 당시에는 반대 시위와 집회를 동시에 주도하였다.

보다 강력한 반대는 5차 굴업도의 사례에서처럼 환경운동연합이 중심이 된 '전국반핵운동본부'의 결성을 통한 반대 시위 주도과 반대 서명 운동과 같은 집단적 활동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당시처럼 과격한 면은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에 지방의 반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 성명서 발표 등을 하면서 꾸준히 부지 공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후 핵연료를 운반하는 과정에서의 사고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폐기장 유치는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을 자칫하면 체르노빌과 같은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만들고 지역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주민의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단체를 비롯하여 많은 주민들은 귀 지자체(또는 기초의회)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주민의 의해 직접 선출되고 주민을 위

해 일하는 지자체(또는 의회)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귀 시의 입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초 자치 단체와 기초 의회의 8월 31일 현재 답변 현황

- 현재 46개 지역 중 지자체와 기초의회를 포함해 25개 지역에서 답변이 왔음.
- 답신을 보낸 대부분의 지자체가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정부와 한전은 이와 같은 여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인식하여 핵

자유 공모와 관련한 갈등

1. 민(民)-관(官) 갈등

1986~1995년 사이에 진행되었던 5차래의 부지 확보 사업에서 정부와 지역 주민의 극한 대립은 사업의 진전을 방해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1986~1995년과 비교해 볼 때 주민과 정부의 갈등의 양상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표 4〉 부지 공모 추진 지역의 조직 결성과 저항

지역	찬성측 조직과 유치 활동	반대측 조직과 저항 형태
전북 고창	• 고창발전위원회 - 유치 서명과 청원 활동	• 반대투쟁위원회(민주당 지구당 중심) • 유치반대대책위원회(농민회 중심)- 일본롯데소무라 처분장 반대 인사(와카코) 강연회, 반대 여론 조성, 핵추첨과 연대 투쟁
전남 영광	• 흥농읍유치추진위원회/영광군유치위원회-유치 서명 및 청원	• 영광핵추첨-원전과 결부시켜 반대 운동
충남 보령	• 유치추진위원회(원산도/삼시도) 유치 탄원서 제출과 서명 운동 주도	• 보령 시민참여연대-서명서 발표 등 반대 여론 조성
강원 양양	• 양양발전연구회/유치추진위 - 지역 사무소 개소/운영, 서명 운동	• 반대추진위원회-반대 결의 대회 개최, 홍보 사무소 향의 방문, 서명 운동
전남 진도	• 진도발전연구회-유치 서명 활동	• 농민 단체-유치 공모 설명회서 반대 표명, 반대 여론 조성
경기 화성/ 경기 하동	구체적 움직임 약함	구체적 움직임 약함

정부에 의한 일방적 사업 진행에 반발해 집회나 시위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이루어졌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은 물리적 충돌은 거의 없다.

물론 부지 공모가 부지 선정이었던 1986~1995년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행태와 양상을 띄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집회나 시위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주민은 반대 조직의 결성을 통한 저항을 하고 있다. 〈표 4〉는 부지 공모 추진 지역의 조직 결성과 저항을 나타내고 있다.

가. 안전성의 문제점

민-관의 갈등이 가장 심한 요인 중의 하나가 폐기물 처분장 건설·

운영시의 안전성 문제이다. 주민들의 반대 이유가 방사성 폐기물과 원자폭탄을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같은 수준의 위험 요소로 보면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2000년 6월 이후 시작된 부지 공모 역시 안전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부지 공모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전국 46개 예비 후보지를 물색했다고 하지만 그 곳들이 과연 기술적으로 적지가 분명하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궁금하다(호남신문 2000, 8월 22일).

1994~1995년에 진행된 5차 부지 확보 사업의 굴업도 사례를 보면 정부가 안전하다고 공식 발표한 이곳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부적합한 단층이 발견되면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불신

을 더해주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의 안전에 대한 보장이 현실적으로 먹혀들지 않으므로 인해 반대의 원인이 된 것이다.

정부에 대한 불신은 현재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불신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 집행 행태에 관한 것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는 사용후 핵연료의 임시 저장 시설이 포함되어 함께 건설하려하므로 인해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전남일보 2000년, 9월 8일).

세계의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건설·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주민의 안전에 대한 믿음을 저하시키면서 민-관의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나. 경제적 보상의 문제

이번 부지 공모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 보상과 지역 개발에 대한 약속이다. 유력한 부지로 거명되고 있는 곳 모두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적 보상이고, 해당 자치 단체나 지방 의회 의원들의 유치 이유 역시 지역 개발에 있다.

정부의 경제적 보상을 보면 전체적인 액수면에서는 이전에 비해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다. 3,000억원의 반 이상이 그 지역에 투자될 것





이며 그 나머지가 처분장 운영 기간인 25년 동안 투자될 것이다. 처분장이 건설될 지역의 경우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현재의 낮은 지가보다는 훨씬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이곳의 주민들은 부지 유치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처분장이 건설되는 지방 정부의 전체 주민들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없다. 물론 처분장 건설 기간, 앞으로 5~6년 동안, 대다수의 주민의 경우 처분장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단지 처분장으로 폐기물을 운송하기 위한 도로나 항만 등의 건설과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상 역시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므로 주민의 편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대다수 주민의 경우 정부의 부지 확보에 부정적이고 정부의 사업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3,000억원이란 지원금이 결국 그 지역으로 투자되어도 주민들은 경제적 혜택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공 정신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 불행하기도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불신의 벽이 너무 높

다. 원자력 시설과 과학·기술 시설을 한 지역으로 모으지 못하고, 어느 한 지역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마을'로 만들려는 정부의 계획이 한심스러운 것이다.

## 2. 민(民)-민(民) 갈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지 공모는 이전과 비슷한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부지 선정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주민과 포함되지 않는 주민간의 갈등, 인근 자치 단체의 주민과의 갈등, 주민과 환경 단체의 갈등의 발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전처럼 격렬한 물리적 충돌은 아직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부지 선정이 본격화되면 이전의 부지 확보 사업에서 나타난 민-민간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민-민의 갈등은 결국 민-관의 갈등으로 발전하므로 인해 부지 확보에 악영향을 주었다.

### 가. 유치 지역 내의 갈등

1986~1995년의 사례에서, 양산의 경우 장안읍발전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유치 활동을 시작한 같은 시기에 유치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어 반대 운동을 하였다. 이들간의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면 유치 찬성 주민들에게 '인사 안하기', '말 안하기', '불매 운동', '관혼상제 불참' 등 비이성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급기야는 찬성측의 장안읍발전위원회 현판식 과정에서 반대측 주

민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현재 부지 공모가 진행중인 영광의 경우 송이도·홍농읍 등 유치위원회가 결성된 지역의 주민과 핵추방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농민회·청년회 등의 반대 세력 사이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대한 갈등이 있다(전남일보 2000년, 7월 5일).

유치 공모를 진행중인 지역의 경우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처분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보다는 처분장 유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재의 지역적·경제적 사정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기대가 유치를 찬성하는 진정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처분장이 건설되어도 토지 수용 등 경제적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처분장이 입지하므로 인해 농산물이나 수산물의 판로와 지역적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반대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영광군의 일부 군 의원이 '주민 투표'를 주장하면서 소지역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광주매일 2000년, 7월 19일;광주매일 2000, 7월 19일).

이와 같은 상황은 충남 보령의 원산도와 삼시도 주민들과 이 지역 외의 주민간에도 나타나고 있다(중도일보 2000년, 10월 10일), 고창·진도·양양 등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부지 공모의 경우 예전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찬·반 주민간 인사 안 하기, 말 안 하기, 관혼상제 불참 등 비이성적인 대응보다는 찬·반을 위한 서명 운동과 청원 추진, 주민 설명회 개최 등 이전과는 다른 보다 이성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금은 발전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나. 인근 지역(자치 단체)와 관계된 갈등

몇 곳에서 이러한 갈등의 양상이 보이고 있다. 경기 화성의 국화도가 부지 공모를 추진하자 인근의 충남당진군에서 반대가 일어났다(대전일보 2001년, 2월 27일). 화성군보다 더 국화도에 가까운 당진군의 반대는 주민 갈등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고창군의 어느 지역이 부지로 선정되면 인근의 영광이나 부안군 주민과의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처분장이 인근의 지역과 거리가 가깝지만 경제적 보상을 결코 받을 수 없는 데 비해서 처분장이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기인하는 농·수산물의 판로와 방사성 오염 지역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나타날 지역 주민간의 갈등은 부지 확보에 대한 반대 원인이 되어 새로운 반대 세력

을 만들어 부지 확보를 통한 처분장 건설에 차질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잠재된 인근 지역간 갈등은 새로운 민-민 갈등에 대한 모습을 보여 줄 것이다.

다. 유치 지역 주민(지역 유지 포함)과 환경 단체의 갈등

부지 공모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민-민 갈등의 모습 중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유치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와의 갈등이다. 유치 지역의 주민의 경우 외부의 환경 단체가 처분장 입지 반대를 함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이익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의 이익과 국민전체의 이익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 지역 주민은 그들의 생활 터전을 방사성 폐기물 부지로 내놓는 대신에 희생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한다.

그러나 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의 입장은 지역의 이익은 차지하고서라도 한반도에 폐기장을 건설하는 것이 국민 전체의 후생과 평화로운 삶에 저해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갈등의 양상이 물리적인 충돌로 번져갈 가능성은 희박하다. 왜냐하면 환경 단체의 입장에서는 폐기장 입지 찬성 주민과의 충돌을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폐기장 건설에 강경한 노선에 서있는 지역 주민은 반핵 환경

단체를 ‘자신들의 재산을 침해하는 세력’ 내지는 ‘폐기장을 반대하는 주민을 선동하는 집단’ 등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게 된다.

결국 환경 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한발 물러나서 폐기장 반대 주민들을 교육하거나, 폐기장 반대 투쟁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물리적 충돌은 최소한으로 막되 제 3의 집단에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언론의 시각  
- 신문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여기에서는 자유 공모를 시작한 2000년 6월부터 자유 공모 연장 마감 시한인 2001년 6월까지의 언론의 시각을 신문 사실과 칼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의 흐름은 자유 공모의 성공 여부를 파악하게 하는 중요한 기준일 뿐만 아니라 자유 공모 당시의 상황을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모습을 살피는 데 용이하다(김경동, 1986:311~318).

기사 자료 제공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원자력 관련 기사 모음집과 한국전력공사 원자



력환경기술원에서 발행하는 보도기  
사 모음집을 활용하였다.

### 1. 연구 대상

신문 사설과 칼럼에서 분석하고  
자 하는 대상은 사회의 각계 각층에  
서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도입된 방사성 폐기물 입지  
선정의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해 어떠  
한 평가를 내리는지에 대해서 우선  
파악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의 선정 방식에서 탈피  
해서 자발적·민주적인 입지 선정  
방식이 가져온 사회적 반응이 어떠  
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자유 공모 방  
식이 과거 정부가 일반적으로 선정  
한 지역 주민들의 거친 반응과 전국  
민적 반대를 일으켰던 상황에 비해  
그것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여론 주도층들이 방사성 폐  
기물 입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어떠  
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지에 대  
해서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이 제  
시하는 대안이 방사성 폐기물 처리  
장에 대한 상식적이고 일반적 이해  
를 형성·촉진하며 대다수의 국민  
들과 지역 주민들이 입지 선정의 성  
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실  
제로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이 입지  
선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중  
요한 기준과 의사 결정의 원천이 되  
기 때문이다.

### 2. 연구 방법

2000년 6월~2001년 6월 동안  
에 방사성 폐기물 관련 총기사 수는  
413개의 기사이며 이 중에서 내용  
분석에서 사용된 사설과 칼럼, 기고  
문의 수는 54개이다. 이 중 중앙지  
의 사설과 칼럼, 기고문 수는 29개  
이고 지방지는 25개이다.

신문 사설의 분석 방법은 내용분  
석법(contents analysis)을 채택  
하였으며 내용분석법은 인간의 상  
징적 기호로 표현된 의사 소통의 기  
록물의 내용적 특성들을 체계적으  
로 기술하고, 나아가 동기(motive)  
와 원인·결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리하려는 사회과학의 분석 기법  
이다(Addison-Wesley, 1969:3~  
5).

또한 그 분석의 절차는 누구나 동  
일 방법을 쓰면 같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뜻의 객관적 분석을  
전제한다. 덧붙여 그 결과를 가능하  
면 통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  
량화하는 기법을 선호한다.

방사성 폐기물과 연관된 신문 사  
설의 내용분석법은 표상모형  
(representational model)을 택  
한다(김경동, 1986:322). 표상 모  
형은 신문 사설에 나타난 생각과 믿  
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으  
로, 신문 사설에서 나타난 내재적인  
의미를 추론하기보다는 맥락적 단  
어(contextual words)가 나타내  
고 있는 사실과 견해를 문구에 나타

난 형태대로 인식하는 방법이다. 사  
실 방사성 폐기물에 관련된 사설과  
칼럼은 함축적·내재적 의미를 가  
지는 문장과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직설적이고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  
하고 있으므로 표상 모형으로 분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문 사설과 칼럼에 나타난 방사  
성 폐기물 처리장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한 평가는 5점 평정 척도법  
(rating scale)을 사용한다.

평정 척도법은 일정한 연속선상  
의 한 점, 또는 의미 있게 배열된  
범주들 가운데 하나에 위치시킴으  
로써 평정자의 의견·입장을 밝히  
고, 자유 공모에 대한 특성을 파악  
하는 접근법이다.

자유 공모에 대한 평가에서 5점  
평정 척도법은 「강한 부정(1점)」,  
「부정(2점)」, 「중간(3점)」, 「긍정(4  
점)」, 「강한 긍정(5점)」으로 구분하  
여 계수화한다. 평가된 점수를 합산  
하여 평균을 구하면 자유 공모에 대  
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평정 척도법의 한계는 평  
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해야 하  
는 것이므로 갖가지 편기가 계통적  
으로 또는 우연히 개입할 소지가 많  
다. 예를 들어, 후광 효과라든지 관  
용의 오류, 대조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같은 평정 척도라도 평가하  
는 사람마다 신문에 쓰여진 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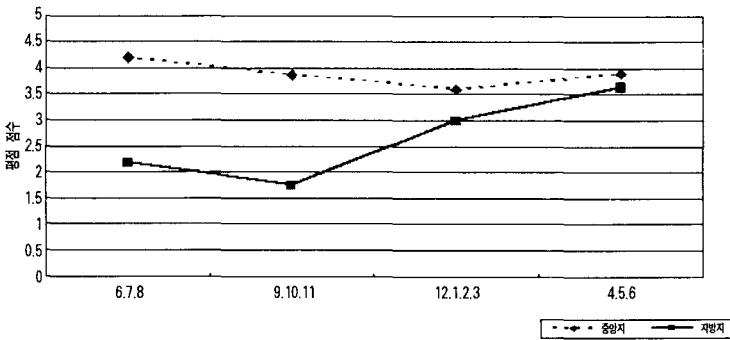
<표 5> 자유 공모의 평가와 정책적 대안의 분석 예시

<p style="text-align: center;">&lt;사설·칼럼·기고문&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목 : '핵폐기장 공모' 해볼만 하다</b></p>	<p>신문사 : _____</p> <p>신문면 : _____</p> <p>날 짜 : _____</p> <p>평가자 : _____</p>															
<p>안면도와 굴업도 사태에서도 확인됐듯이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편의적인 정치-행정논리로만 밀어붙일 수 없는 민감한 국가적 현안이다. 이점에서 정부가 소요 용지 60만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公募)에 나선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접근방식이어서 긍정적으로 지켜볼 만하다. 하지만 과연 어떻게 환경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층의 여론을 원만하게 수렴하고 주민동의 또한 무리없이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여전히 만만치 않는 과제로 남는다.</p> <p>(중간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I. 자유공모에 대한 평가</p> <div style="text-align: center;"> <table border="0"> <tr> <td>강한 부정</td> <td>부정</td> <td>중간</td> <td>긍정</td> <td>강한 긍정</td>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r>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able> </div>	강한 부정	부정	중간	긍정	강한 긍정						1	2	3	4	5
강한 부정	부정	중간	긍정	강한 긍정												
1	2	3	4	5												
<p>...정부와 한전은 안전성에 대해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다짐하고 있으나 그 노력은 각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없었던 과거식 사업자 주도 추진을 지양, 주민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2100억원의 지역개발사업 지원이란 인센티브도 건설의 충분조건은 아니다.</p> <p>원전에서 나오는 의류 폐부품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사용후 연료를 중간 저장하는 시설은 모두 폐기장의 생명인 안전성이 핵심과제다. 지상 구조물에 보관하는 천층방식이든 해저의 동굴방식이든 사업주체는 폐기장이 환경과 안전에 전혀 문제될 게 없음을 국민과 주민들에게 성실하고도 꾸준하게, 그리고 실증적으로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주민동의 후에도 정밀 지질조사 등 약속한 안전조건을 철저히 충족시켜야 한다. 아울러 처리장의 행정과 관리까지도 주민과 함께하는 선진 각국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용 사례도 원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로 사업을 성공시키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center;">II. 정책 대안 핵심어 추출</p> <p>핵심어 1: _____</p> <p>핵심어 2: _____</p> <p>핵심어 3: _____</p> <p>핵심어 4: _____</p> <p>핵심어 5: _____</p> <p>핵심어 6: _____</p>															



〈표 6〉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한 5점 평정 척도의 총점과 평균

	분석 사실·칼럼 수	5점 평정 총점	평균 점수
중앙지	29	113	3.89
지방지	25	70	2.8
계	54	183	3.39



〈그림 1〉 기간별 평정 점수 추이

해석하는 준거틀이 달라서 대담의 안정성 또는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주관적 판단으로 인한 편지를 막기 위해서 연구자 3인이 동일한 사실과 칼럼에 대해 평가하였고 연구자간에 시각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사실과 칼럼에 나타난 정책적 대안을 분석하는 방식은 사실의 결론 부분 문단에서 핵심적인 단어(key words)를 2개에서 6개까지 추출하여 그 단어의 빈도 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핵심적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문장이나 제시하는 문장의

주어 내지는 목적어로서 강한 어조와 명료한 단어이며 문장의 맥락적 의미를 고려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내용 분석의 모형을 표상모형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내재적·합축적 단어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문장에서 단어를 추출하는 기준이 연구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관적 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한 평가와 같이 3명의 평가자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단어를 추출하였고 2인 이상의 선택한 동일 어휘가 아닐 경우는 제외하였다. 〈표 5〉는 사실·칼럼에서 나타나 있는 자유 공모의 평가와 대안의 분석에 대한 예시를 나타낸다.

### 3. 분석과 평가

#### 가. 자유 공모의 평가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한 평가는 우선 5점 평정 척도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표 6〉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지에서 나타난 자유 공모에 대한 평가는 총점이 113점, 평균은 3.89로 높게 나타난 반면 지방지의 25개 신문·칼럼의 5점 평정법의 총점은 70점이고 평균은 2.8로 중앙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중앙지의 자유 공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자유 공모 방식이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사 결정에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고 있으며, 방법론적으로 15년간이나 끌어온 폐기장 건설에 대한 희망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언론 활동을 하는 지방지와는 달리 중앙지는 전체 국민이 그들의 구독자이며 이러한 독자층은 폐기장 건설의 잠재적 이익 수혜자(latent beneficiary)이므로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지의 경우 2.8이라는 점수가 의미하는 바는 폐기장 건설이 들어서는 지역의 여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유 공모의 방식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돈을 위해 영혼과 애항심을 파는' 행위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사실과

칼럼에서 주역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 입지 예정지로 거론되기만 하면 그 지역 신문이 앞다투어 비판론의 기사와 사설을 싣는 것을 보면 지역에서 방사성 폐기장 건설이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알 수 있다.

한편 자유 공모 방식에 대한 여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시계열 분석의 기간은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이며 3개월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기사수의 부족으로 4개월을 1단위로 묶었음).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중앙지의 시간에 따른 평정 점수의 추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수준에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번째 묶음인 2000년 12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평정 점수가 다른 기간보다 낮게 점수가 형성된 것은 최초 공표된 마감 시한이 2001년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입지 선정의 자유 공모가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불안감과 회의감이 자유 공모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갈등이 다양한 부문과 여러 지역에서 터져나왔고 그 중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에 관련한 입지 선정 갈등이 15년 동안 지속되면서 여론 주도층의 사고에 각인이 되었다. 이

들이 가지고 있는 폐기물 입지 선정의 폭력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여론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지의 경우 변동의 크기가 크며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점차적으로 평정 점수가 의외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번째 묶음인 2001년 4,5,6월에 와서는 거의 긍정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을 알 수 있다.

사실에 나타난 여론이 변화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폐기장 공모를 바란다는 기사와 사설이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증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역 주민의 호응도가 원전 관계자의 설득 노력이 배가되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 주민의 여론이 이처럼 변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방 신문에 기고한 사람들이 대체로 높은 교육 수준과 기술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계층의 인물들이 대부분이고 원자력 관계자들의 여론몰이가 주요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사실에 나타난 자유 공모에 대한 평가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나. 정책적 대안의 분석

다음으로 신문 사실과 칼럼에 나타난 정책적 대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책적 대안의 분석은 문단과 문

장에 나타난 핵심 단어의 빈도수를 파악하여 분석한다.

분석은 중앙지와 지방지를 분리해서 29개의 중앙지의 사설에서 112단어를 추출하고 25개의 지방지의 사설에서 90단어를 추출할 수 있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추출한 단어 가운데 중복되는 단어를 선정하여 20개로 압축하였다. 그리고 20개의 단어를 다시금 4개의 묶음(category)으로 분류하였다.

4개의 묶음의 구분은 ① 경제적 지원에 관련된 단어군 ② 의사 결정 방식과 성격에 관한 단어군 ③ 원자력 기술에 관련된 단어군 ④ 정부의 역할에 관련된 단어군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표 7>은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선정된 20개의 단어와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설에서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과 방사성 폐기물 기술에 관한 신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한 부분에서 원자력 발전과 폐기물에 관한 정보의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전성에 관한 철저한 기술적 담보가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유 공모의 기본적 전제인 주민의 참여하에 폐기장 입지 선정



〈표 7〉 신문과 사설에 나타난 정책적 대안의 핵심적 단어와 비율

구분 단어	중앙지 빈도수(번)	중앙지 빈도수 비율(%)	지방지 빈도수(번)	지방지 빈도수 비율(%)
1. 남비 현상	8	7.14	4	4.44
2. 안전성	18	16.07	11	12.22
3. 지역 개발	9	8.03	7	7.77
4. 경제적 보상	1	0.89	3	3.33
5. 주민 동의	12	10.71	11	12.22
6. 공개성	7	6.25	9	10
7. 투명성	9	8.03	5	5.55
8. 홍보	4	3.57	4	4.44
9. 신뢰성	8	7.14	8	8.89
10. 갈등 해소	1	0.89	5	5.55
11. 적극적 지원	3	2.68	0	0
12. 전문적 관리	5	4.46	1	1.11
13. 민주성	5	4.46	2	2.22
14. 토론	2	1.78	2	2.22
15. 생존권	1	0.89	3	3.33
16. 환경 친화성	5	4.46	1	1.11
17. 엄격성	4	3.57	2	2.22
18. 참여	5	4.46	5	5.55
19. 공공성	3	2.68	3	3.33
20. 과학 기술	2	1.78	4	4.44
합 계	112	100	90	100

〈표 8〉 묶음화된 정책적 대안의 핵심적 단어와 빈도수

묶음 단어군	맥락적(contextual) 단어	중앙지	지방지
		단어 갯수와 빈도	단어 갯수와 빈도
경제적 지원	지역 개발, 경제적 보상, 생존권	11개(9.81%)	13개(14.44%)
의사 결정 방식과 성격	주민 동의, 공개성, 투명성, 신뢰성, 토론 참여, 엄격성	61개(54.46%)	53개(58.89%)
원자력 기술	안전성, 과학 기술 발전, 환경 친화성	25개(22.32%)	16개(17.78%)
정부의 역할	홍보, 적극적 지원, 공공성, 전문적 관리	15개(13.39%)	8개(8.89%)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 동의가 높은 빈도 수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의 정부 주도의 밀실적 의사 결정과 폐쇄적 독선주의가 빛

어낸 갈등을 자유 공모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싣고 있는 것이다.(변동건, 2001).

반면에 자유 공모의 가장 핵심적

인 경제적 보상이나 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상대적으로 빈도 수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3,000억원의 지원에 대한 불만은 적은 반면에 과연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의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정부의 신뢰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정책 신뢰성의 측면에서 정부의 요동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정책에 관한 재평가가 정책 과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7〉을 몇 가지의 묶음으로 재구성한 것이 〈표 8〉이다. 묶음의 구분 기준은 ① 경제적 지원에 관련된 단어군 ② 의사 결정 방식과 성격에 관한 단어군 ③ 원자력 기술에 관련된 단어군 ④ 정부의 역할에 관련된 단어군이다. 표에서 보듯이 의사 결정 방식과 그것이 성격에 관한 정책적 대안이 가장 빈도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과거의 정부의 의사 결정이 독단적·폐쇄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병폐가 사회 집단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와 더불어 방사성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의 혼선과 미비로 인한 의사 결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도 크다.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 동의하의 자유 공모에 대한 국민들과 언론의 기

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지와 지방지의 비교에서 의사 결정의 방식과 성격은 비슷한 빈도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묶음 단어군에서 비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지원의 측면에서 중앙지보다 지방지에서 그에 관한 언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방사성 폐기물이 건설되는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이 중앙보다 더 높은 관심과 열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여타 다른 안전성과 의사 결정 방식도 중요하지만 폐기물 시설의 입지를 그들이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욕구는 전적으로 경제적 지원 때문이다.

사실 자유 공모의 배경이 경제적 지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경제적 보상과 지원을 대안으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앙지와 지방지의 관심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중앙지에서의 사실과 칼럼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여 더 높은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의도한 반면, 지방지는 정부 역할을 소극적으로 기대하여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는 밀착되어 있는 반면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당하는 중앙 정부는 지역 주민과 괴리되어

있다.

지역 주민과 거리가 있는 중앙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역 여론의 시선이 고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과 개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중앙지에서 더욱 높고 지방지에서는 낮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의 태도에 대한 분석은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것을 극복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자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여 중앙지와 지방지에 나타나 있는 자유 공모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폐기물 입지 선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는 대체로 중앙지에서는 자유 공모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던 데 비해 지방지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도 점차 자유 공모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정책적 대안의 분석에서는 중앙지와 지방지에서 단일 정책 대안으로서 상당 부분 방사성 폐기물에 관한 안전성을 최우선 정책적 고려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묶음 단어군의 형태로서는 의사 결정의 방식에 대한 성격이 가장 두드러진 고려 사항으로 나타났다.

### 1985~1995년과 2000~2001년 입지 선정 과정의 비교

1985~1995년까지의 입지 선정 과정은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최적지를 선정, 조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주민들의 저항이 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고, 2000~2001년 6월까지의 이러한 저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이 '열어놓고, 투명하게, 그리고 경제적 유인책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슬로건 아래 자유 공모 방식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결국 정부는 다시 사업자 주체가 되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돌아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는 두 시기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양자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1. 1985~1995년 입지 선정 과정

1·2차 시도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없었고 보상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설혹 보상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그들의 보상 수준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4·5차에서





〈표 9〉 두 시기의 입지선정과정 비교

구분	1985~1995년까지의 입지 선정 과정	1998~2001년까지의 입지선정과정
소관 부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사업 주체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전력공사(원자력환경기술원)
적용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자력법</li> <li>•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촉진과 시설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원자력법</li> <li>•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li> <li>•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li> </ul>
부지 선정 방법	사업자(정부) 주도 방식	자유 공모 방식
사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정부의 일방적인 부지 선정) - 육지 처분의 원칙, 소비 경비의 발생자 부담의 원칙, 중앙 집중 처분 원칙. 국가 주도 비영리 기관에서 수행</li> <li>• 2차-철저한 보안 유지를 통한 인면도 부지 선정과 보상에 정보 비공개 원칙</li> <li>• 3차-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자원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li> <li>• 4차-민주적 절차, 지역 개발 사업의 연계, 주민 합의</li> <li>• 5차-기존 과거처 주도의 사업을 범부처적 적으로 추진하고 독립성·공개성·명확성 효율성·신뢰성 5대 원칙 천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국가 책임하에 관리</li> <li>• 방사성 폐기물의 생태적 및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다음 세대의 부담을 최소화</li> <li>• 원자력 발전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 노력</li> <li>• 국민의 신뢰하에 대국민 이해를 넓히면</li> </ul>
실패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가 없었음</li> <li>• 부지 선정 과정을 비밀주의로 일관</li> <li>• 부지 선정 또한 일방적·하향적으로 이루어져 이해 관계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li> <li>• 반핵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급진 단체(공해추방운동연합)의 운동</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와는 달리 환경 단체들의 조직적인 반대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공모 과정에서 선거를 의식한 지역 국회의원, 자치 단체장 등의 반대 또는 미온적 태도</li> <li>•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불신 계속 상존</li> <li>• 반핵 세력들의 음성적인 반대, 과장, 왜곡 선정이 계속됨</li> </ul>
추진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선정 과정 잠정 유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유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정부)주도 방식으로 전환됨</li> </ul>

는 주민 참여의 범위가 점점 개선되고 법제도화로까지 진전이 된다는 특징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다.

좀 더 자세히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우선 부지 선정 과정을

주도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그 과정을 비밀주의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였다는 점이다.

동 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장의 주민 수용은 매우 민

감하여 그 수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사유지 매수시까지 절대 보안을 유지하여 토지 확보를 추진하며 그 후 서서히 입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 부지 선정이 과학기술처의 원자력위원회에 의해 일방적·하향적으로 결정되어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주민 협의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비밀주의적 의사 결정과 전문 집단에 의한 부지 선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는 하나 처분장의 속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정부 당국이 체계적으로 적시에 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한 반면, 일부 환경단체가 제공한 처분장에 대한 부정적 정보에 의한 주민 협의, 즉 협상의 가능성은 거의 멸실되어 버렸다.

그밖에 1987년 6월부터 시작된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의 과정에서 형성된 일정한 사회적 세력과 심리적 추세를 정책 형성 과정에서 간과하였던 것이다.

특히 반핵 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부 급진 단체(공해추방운동연합)의 운동을 과소 평가하였다.

한 마디로 이 시기의 입지 선정 과정은 주민들의 사전 의견 수렴 절

차없이 사업자 주도에 의한 추진, 관리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지역 이기주의의 확산 및 사전 부지 조사 미흡 등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 2. 2000~2001년 입지 선정 과정

이 시기는 지역 주민과 합의 과정 없는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는 성공하기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지역 주민의 의사 존중, 투명하고 공개적인 부지 확보 추진을 그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결정-발표-옹호하던 태도를 바꾸어 전국 46개 임해 지역 지방 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3,000억원의 지원금을 내걸고 후보지 유치를 공모하였다.

과거와는 달리 환경 단체 등의 조직적인 반대가 상당히 완화되었으나 공모 과정에서 선거를 의식한 지역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장, 지방 의회 의원 등이 반대 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속적인 홍보 및 설득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불신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었으며, 환경 단체·시민 운동

단체 등 반핵 세력의 음성적인 반대 및 과장·왜곡 선전 또한 계속해서 일어났다.

결국 정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자유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입지 선정 과정을 전환한 상태이다.

### 결론

2000년 6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만 일년 동안 진행된 방사성 폐기물 자유 공모는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 공모 방식이 갖는 지역의 자발적 참여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어 자유 공모의 마감 당시의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사의 개진은 방사성 폐기물 입지 선정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찬성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반대하고 있으며 지방 의회 의원이나 국회 의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방사성 폐기물을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자 단체장이 직접 나서 유치

반대의 입장을 밝히거나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청원서를 반려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자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청원 명부의 신빙성에 대한 의구심과 반핵 단체들의 반대 투쟁이 부담되기 때문이었다.

특히 유치 반대 주민들과 연대한 환경 단체들의 조직적이고 정치적인 공격이 자치 단체의 수장과 지역 의원, 국회 의원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의 의사 동향과 인기에 따라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국회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이슈가 될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정치적 이슈가 클수록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경우 되돌리기 어려운 정치적 상처를 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 현실에서 의원들에게 결단력 있는 정책을 결정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할 일인지도 모른다. 결국 영광·강진·고창·진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였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찾는 자유 공모는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2002년 선거 뒤로 연기되었다. ☹

2) 자유 공모 마감 당시 전남 영광군에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2만 5000명이 유치 청원서에 동의했으며 전북 고창에서는 전체 주민의 24%인 1만 2,490명이 유치 청원서에 동의했다. 뿐만 아니라 전남 강진군에서도 전체 주민의 44% 수준인 1만 6,300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전남 진도군민유치위도 유권자의 19%에 달하는 6,112명의 서명을 받아 유치 청원서를 제출하였다.